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27
----------	------

2013. 07. 05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3년 6월 27일 서영진 의원외 2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 07. 0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서영진 의원)

- 최근 박근혜 정부는 도심의 철도부지나 우수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수도권 지역에 시범지구 7곳을 지정한 바 있음.
- 하지만 행복주택 프로젝트 정책은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론 수렴 없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발표함에 따라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임.
- 또한 일부 시범지구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 정책 발표로 인

해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개발 계획들이 전면 백지화될 우려가 있음.

3. 주요 내용

- 가. 최근 박근혜 정부는 사회취약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없이 철도부지 및 우수지 등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골자로 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시범지구를 지정한 바 있음.
- 나. 하지만 수도권내에서 시범지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과 반대여론이 비등한 실정임.
- 다. 이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 개발계획 및 지역여론에 대한 면밀한 수렴없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 바에 기인함.
- 라.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여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지역주민의 반발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동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5. 이송처 : 국회, 국토교통부

6.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결의안의 배경

- 최근 박근혜 정부가 사회취약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내 시범지구 7개 지역에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본 결의안은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 개발계획 및 지역여론에 대한 면밀한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과 불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성공 또한 장담할 수 없으므로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6월 27일 서영진 의원 외 29명이 발의하여 2013년 6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 행복주택 건립대상지 및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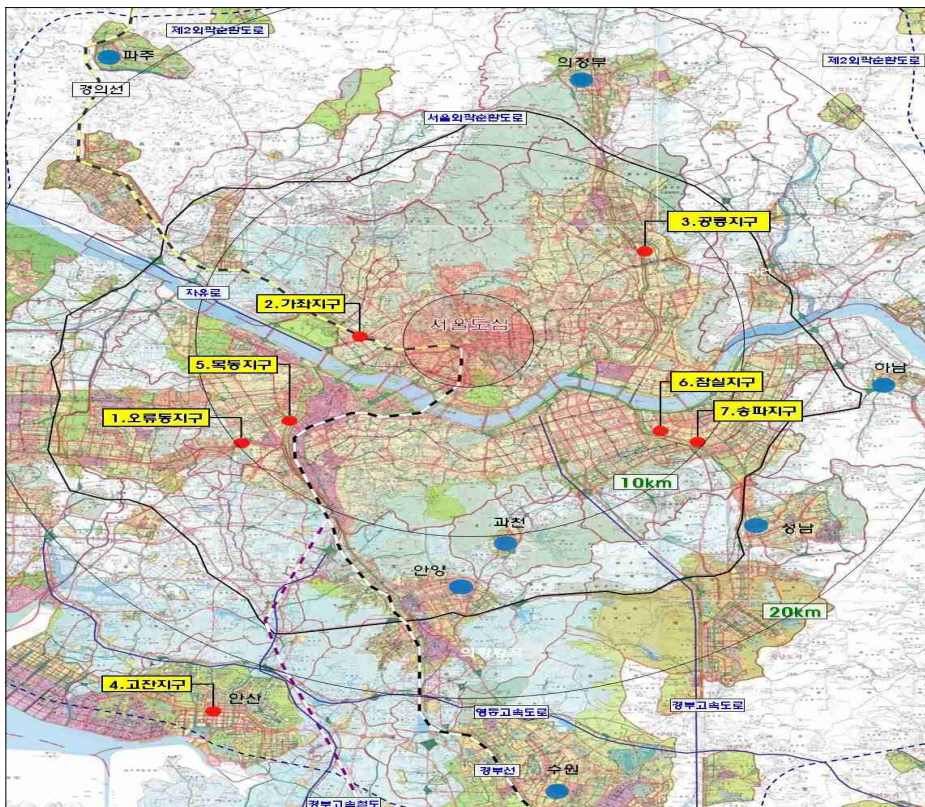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인 행복주택을 수도권 7개의 시범지구에 1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2013년 5월 20일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에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복합적으로 디자인하고,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하며, 사회적 기업 등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환경·대학·소통·스포츠·다문화 등 지구별로 특화하여 개발한다는 내용임.
- 7개 시범지구 중 경기도 안산시 고잔지구(철도부지)를 제외한 6개 지구가 서울지역으로서, 철도부지와 유수지가 그 대상이며, 규모는 17,000평방미터에서 110,000 평방미터에 이르며, 총 면적은 441,000 평방미터이며, 건립 예정 규모는 8,550호임.

< 행복주택 시범지구 개요 >

지 구 명	위치 및 면적	건설호수 (호)	개발방향
① 오류동지구 (철도역사)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 109,000㎡(오류동역 일원)	1,500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행복주거타운
② 가좌지구 (철도역사)	·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 26,000㎡(가좌역 일원)	650	지역간 소통 공간인 “브릿지 시티”
③ 공릉동지구 (폐선부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 17,000㎡(경춘선 폐선부지)	200	녹지와 대학문화가 함께하는 도시공간
④ 고잔지구 (철도역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 · 48,000㎡(고잔역 일원)	1,500	다문화 소통의 공간
⑤ 목동지구 (유수지)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 105,000㎡(목동 복개 유수지)	2,800	“물과 문화”를 주제로 개발
⑥ 잠실지구 (유수지)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 74,000㎡(잠실유수지)	1,800	스포츠와 공동체문화가 살아있는 공간
⑦ 송파지구 (유수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 110,000㎡(탄천유수지)	1,600	활기찬 오픈마켓 (場 마당)
총 7개 지구 489,000㎡		10,050	

※ 서울지역 : 총 6개 지구 441,000㎡, 8,550호

< 시범지구 위치도 >



□ 검토사항

- 국토교통부는 본 계획에 대해 2013. 4. 19.일 서울시에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하여 2013. 5. 9일까지 협의 의견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14일간 오류동지구를 제외한 5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열람공고를 시행하였음¹⁾.
-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공급계획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확충 목표에 크게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나, 해당지역 주민과 자치구의 반대 등 갈등이 극심한 실정이므로 해당 자치구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시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복지시설,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지원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2013. 5. 7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²⁾.

1)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20일 이내,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를 한 후 주민 등의 의견청취¹⁾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제10조).

2) 행복주택 건립 대상지가 철도부지와 유수지로서, 서울시는 철도부지 대상지역과 관련하여, 철도인근은 양측면이 단절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던 점을 감안, 최대한 복개하여 양측면을 연결하고 주민의 문화·복지시설, 휴식공간 등을 적극 도입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차원의 배려와 조성을 요망한다는 의견을, 유수지 대상지역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지역주민들에게 절실한 체육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로 정착된 공간으로, 만약 체육시설이 없어지고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면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반발과 기존시설의 축소 또는 소멸에 대한 거부감으로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시설의 대체 공간 등의 적절한 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

- 특별법의 목적이 국가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 사이에 상호 업무협조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또는 예외를 규정하여 강한 법집행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여 그 영향이 미치는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도 관계없거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로 한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임.
- 그런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비록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이라 하더라도,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시내 6개 지역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과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행복주택의 지정을 위한 진행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 개발계획 및 지역여론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지가 속한 자치구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기 개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 등으로 주민들의 집단적 반발을 불러오고 있음.
 - 최근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하여 시행된 공청회와 사업 설명회가 시범지구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고 있어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 건설 추진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유수지는 각종 생활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정착되어 있어 행복주택을 건설할 경우 환경악화 및 지역주민의 편익공간이 사라질 우려가 있으며, 노원구

공릉동 폐선부지 및 주변지역은 지역주민, 국회의원, 시의원, 자치구와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 관광명소화 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된 부지이기도 함.

-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행복주택 건립 대상지로 결정하기 이전에 지역주민과 서울시, 관계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범지구 중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철도소음 및 환경문제로 주거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종합하면, 중앙정부가 적절한 대안 개발없이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강행한다면 그 시행여부 조차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 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바, 지역이기주의 등에 따라 행복주택의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안될 것임(김정태 위원).

행복주택 일방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지난 5월 박근혜 정부는 도심의 철도부지나 우수지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골자로 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공릉동·잠실·송파·목동 등 수도권 도심 7곳을 시범지구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동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발표함에 따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동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이 많아지고,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행복주택 추진과 관련하여 시행된 공청회와 사업 설명회가 시범지구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행복주택 추진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범지구 중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철도소음 및 환경문제로 주거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우수지는 현재 각종 생활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이 입주해 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간임을 고려할 때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환경악화 및 지역민의 편의공간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

또한 공릉동 철도부지의 경우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및 노원구에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심 철도부지 및 우수지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금번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건설 발표로 이러한 개발계획이 전면 백지화 될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여론에 밀려 그 시행여부와 함께 성공 여부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여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각 지자체가 자체적인 발전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2013.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